장기 이식 희망자는 더 기다릴 수 없다

광주·전남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157명…매년 증가 수술 건수 급감…의정 갈등 속 생명 위독 환자 위한 대책 시급

광주·전남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장기이식 수술 건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여파로 장기이식 수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등이 나오면서 위 독한 환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국립장기 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수는 29명, 전남은 59명으로 지계돼다

광주 지역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9년 47명, 2020년 52명, 2021년 59명, 2022년 73명, 2023년 66명으로 증가세다. 전남 또한 2019년 73명, 2020년 73명, 2021년 83명, 2022년 69명, 2023년 9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도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2019년 2145명에서 매년 지속 증가해 지난해 2907명으로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장기 이식 대기자 수 또한 2019년 3만 2990명에서 지난해 4만 3421명으로 1.3배 늘었다.

장기이식 평균 대기 일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기준으로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2196일(6년)을 대기해야 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2802일(7.6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다

췌장 이식은 2019년 1263일에서 올해 2104일 로, 심장 이식은 2019년 211일에서 올해 385일 로 각각 대기 시간이 늘었다. 반면 올해 2~8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북구을)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연도별·월별·장기별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8월 전남대병원의 5대장기이식(신장·간장·췌장·심장·폐장) 건수는 32 거이다

이식장기별로 보면 신장 20건, 간장 3건, 심장 8건, 폐장 1건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월) 65건에 비해 50.77% 감소한 수치다.

조선대병원 또한 2023년 13건에서 2024년 10 건으로 수술 건수가 23.08% 줄었으며, 올해는 신 장 4건, 간장 6건을 이식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5대 장기이식 건수는 2024년 2~ 8월 835건으로 전년 동기 1082건과 비교할 때,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장기기증에 앞서 의료인이 되사 환자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의료 공백과 맞물려이식 동의율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전진숙 의원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중증·응급 상황의 환자들이 의료공백으로 적기에 이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정갈등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기자 yjyou@kwangju.co.kr



실전처럼

2024년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5일 광주시 광덕고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대병원 사직 전공의들 병원 상대 손배 제기

"사직처리 늦어져 취업·개원 못해"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취업, 개원 등을 못 해 피해를 입었다며 각 병원을 상대로 손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전공의 (16명)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9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57명이 각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청구금액은 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월 전공의 225명이 제출한 사직서를 8월 전부 수리

했다.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충남 대병원 각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 (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 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 명(1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를 제기한 전공의들은 의료법과 전문의수련규정을 들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과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중 1만 1732명(86.7%)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병원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연재기자 yjyou@

횡단보도 건너던 여대생 신호위반 차에 치여 숨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대생이 신호위반 차 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광산경찰은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5일 바려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건너던 20대 여대생 2명을 치고 이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지고 다른 1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여순사건 유족들 "진상규명 성과 없고 참담"

희생자•유족 결정 9.5% 그쳐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만료됐지만 희생자·유족 결정이 9.5%에 그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순 10·19 항쟁 전국유족총연합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진 상규명의 참담한 결과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번 울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여순특 별법이 통과됐고 2022년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 했다. 이달 5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은 종료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여순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한차례도 유족회와 면담을 하거나 진상규명과 관 련한 실질적인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범 이후 회의는 9차례밖에 개최되지 않았고 이 마저도 7차례가 서면으로 이뤄졌다.

또 전체 7465건의 유족·희생자 신고건 중 710 건만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90% 이상의 신고건은 여전히 미결정 상 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희생자 결정서 를 기다리던 유족2세들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 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순특별법의 조 속한 개정과 여순사건위원회의 저조한 성과에 대 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 현재 10%도 미치지 못하는 희생자 유족 결정 사건 처리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업무 성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해 공개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

졸업앨범서 사라지는 담임 얼굴

교원 93.1% "딥페이크 악용·초상권 침해 우려"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은 졸업앨범에 들어간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 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의 93.1%가졸업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나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들은 줄고 있었다. 72.5%는 '사진을 넣는 것이 점점 줄고 있다'고 답했고 17.7%만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담임의 얼굴 사진도 20.4%는 '넣지 않는다'고 했고, 17.7%는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고 답 했다. 학급 단체 사진에서도 14.9%는 담임 사진

을 넣지 않았다.

학생 또한 졸업앨범에 사진이 들어가길 꺼리고 있었다. 사진 넣기를 꺼리거나 빼기를 원하는 학 생이 늘고 있냐는 질문에 교원 45.5%는 '그렇 다'고 답했다.

졸업 앨범에 교원 사진을 어디까지 넣어야 하나는 질문에는 '희망자만 넣어야 한다'가 49.8%로 가장 많았고, '모두 넣지 말아야 한다'도 38.7%나됐다. 졸업 앨범 제작에 대해서도 '제작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67.2%에 이르렀다.

교총은 "교사 사진이 학생·학부모의 SNS, 단 톡방에 무단으로 올려지고 조롱거리가 되거나 심 지어 성 착취물에 합성되는 등의 일까지 벌어지 면서 사제동행의 의미마저 점점 퇴색하는 안타까 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